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 근본적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돼야”

도내 저출산 극복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19위”라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0명대이며, 올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출산율이 유례없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하게



장래에 ‘지방소멸’이라는 재앙까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총 1조2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같은기간 동안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수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회의 진행하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제362회 전라북도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개회가 실시된 9일 전북 전주 시 전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개회사 이후 자리를 비운 송성환 전북도의회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CCTV 설치 지원 필요”

최근 서울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가 14개월 아이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1)은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지원 방안 등 도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아이돌보미 이용자는 2016년 3,223가정 4,947명에서 2018년 3,279가정 5,06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돌보미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편리해 맞



별이·다자녀 가정 등의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자 전라북도는 올해 관련예산을 180억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77% 증액하고, 돌보미도 2019년 1311명으로, 2018년 1,061명에서 250명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신청 가정의 CCTV 설치를 무상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정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현재 아이돌봄 신청 사이트에서는 가정 내 CCTV 설치 유무를 묻고 있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아이돌봄 신청 1,792 가정 중 약 11%에 달하는 205개 가정이 CCTV를 설치했지만 비용 부담과 아이돌보미 사전 동의 등의 문제로 설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간동안 CCTV 설치 지원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해 전북도가 정책 기획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당정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문 대통령 “전환법안 신속 처리해야”

“처우 개선·지역별 격차 해소, 효과적 재난대응 위한 것”

이 총리 “대규모 화재 조기 진압 위해 필요한 일 됐다”

민주당, 4월 국회서 국가직 전환 관련법 통과 다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강원도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 조건에서도 현장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제공자의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방송 메뉴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

혔다.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복구 지원 사업을 계획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피해 복구를 넘어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특수헬기 도입, 소방직 국가직화, 재난방송 강화, 방재에 적합한 건축 대책 등을 “관련 부처에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며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진화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4월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계 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섰다. 대형 참사와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뉴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전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 건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청 건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을 통보하여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의 단서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해양관광 활성화 위도 살려야”

최훈열 도의원

영광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와 어획량 감소,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 서해 해리호 사건의 피해의식이 더해진 전체의 관광자원인 위도가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되살리기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전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해의 관광자원인 위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큰 배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공동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큰 배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필요하다”면서 “식도는 파장급항에서 거리상 1.2km밖에 되지 않지만 항상 배편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인구유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도초 식도분교가 폐교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6년 결항율은 23%, 2017년은 26.8%, 2018년은 3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항율이 위도주민들을 더욱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훈열 의원은 “고슴도치를 담은 섬 위도는 도 전체의 관광자원이자, 이곳을 찾는 모두가 하나같이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야말로 힐링을 받게 되는 섬”이라면서 “도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농협 조합장 임인규



북전주농협 조합장 이우광



용진농협 조합장 정완철



소양농협 조합장 유해광



상관농협 조합장 이재욱



구이농협 조합장 안광욱



이서농협 조합장 송영욱



삼례농협 조합장 강신학



봉동농협 조합장 김운희



고산농협 조합장 국영석



화산농협 조합장 김종채



운주농협 조합장 윤여설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김우철



전주김제원주축협 조합장 김창수

전주완주시군 관내 농축협 조합장 일동